

왜 한반도는 통일해야 하는가?*

: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박 세 일

(한선재단 상임고문, 서울대 명예교수/법경제학)

【目次】

- | | |
|---------------------------------|---------------------|
| I. 세계권력중심의 이동 | Ⅲ. 한반도 통일의 3가지 시나리오 |
| II.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막는
두 가지 장애 | IV. 통일과정의 두 가지 과제 |
| 1. 북핵문제 | V. 미래를 향하여 |
| 2. 한반도 분단문제 | |

I. 세계권력중심의 이동

주지하듯이 19세기는 영국의 시대였다. 그리고 20세기는 세계의 중심이 미국에 있었다. 그러면 21세기 세계중심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1세기 세계권력의 중심은 아시아-특히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부터 20년 전-1990년대- 미국의 GDP는 중국, 일본, 인도 세 나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컸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후-2040년대-에는 미국과 서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등등 모든 서유럽 나라)의 GDP를 합친 것이 중국과 인도의 GDP를 합친 것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명 세계의 힘의 중심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 이 글은 2014년 9월 12일 중국 山東大 에서 열린 제 2차 동북아포럼의 비공개회의에서 기조 발제한 내용을 정리·보완한 글로서 특히 중국의 지도자 지식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미래질서의 모습이 아직 안 보인다는 데 있다. 동아시아의 미래질서가 평화의 질서가 될지, 전쟁의 질서가 될지 아직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평화와 전쟁의 가능성이 둘 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평화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그 일에 한국과 중국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고 나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21세기 중국과 한국은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자주독립과 호혜평등의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고, 그를 기초로 하여 21세기 동아시아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본다.

II.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막는 두 가지 장애

그런데 앞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현재 두 가지 큰 문제 내지 걸림돌이 있다.

1. 북핵문제

하나 [북핵문제]이다. 북한에는 2014년 현재 약 20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2016년 약 34개 2018년 약 43개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문제는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소형화(小型化)·경량화(輕量化)가 이루어져 미사일에의 탑재가 가능하게 된다. 실전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북이 직접 핵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북은 핵 공갈, 핵 위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내부의 정치안정과 군사균형은 깨지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는 극히 불안정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이대로 두고는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많은 전문가는 자발적 핵포기와 자발적 개혁개방은 거의 불가능(highly unlikely)하다고 본다.

나는 북한의 지난 60년 역사를 살펴 본 적이 있다. 두 가지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나는 지난 60년간 북한은 (1) 일인독재를 계속 강화하여 왔다. 수령절대주의가 완화된 적이 없다. 김일성보다 김정일의 유일사상과 수령절대는 더 강력했다. 김정일의 경우도 초기보다 후기로 오면서 수령절대는 더욱 강화되어 왔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

은 (2) 북은 지난 60년간 핵개발 노력을 계속 강화하여 왔다. 결코 개발의지와 노력이 중단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북한의 자발적 개혁개방 그리고 자발적 핵 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사실 수령절대주의와 선군사상/ 핵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독재와 전쟁국가는 항상 같이 가는 법이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중국의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행동을 볼 때 북핵이 중국 안에 있는 반체제적인 저항적 소수민족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상상하기도 끔직한 대 재앙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완전히 성공하여 실천배치 단계에 들어가면 갈수록, 일본도, 한국도 자신들의 자위를 목적으로 한 핵무기 개발의 필요를 본격적으로 느낄 것이다. 분명 이러한 도미노적 상황의 전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그 입장이 보다 단호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모든 나라에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사실 큰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동아시아에서 21세기형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열릴지 모른다. 21세기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되지 못하고 전쟁과 파괴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모든 나라와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 북핵의 문제를 풀 것인가?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보면 북핵문제는 2가지 대응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대화와 압박이 그것이다. 그러나 6자 회담이라는 대화의 방법도, UN 제재라는 압박의 방법도 모두 실패하였다. 대화나 압박의 방법만으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김씨 세습체제의 생존-정당성 등-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핵문제를 푸는 남아 있는 방법은 아마 다음의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핵 제거공격(surgical strike)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다. 그 이외의 대안-예컨대 6자회담 등등-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의 시간만을 주는 셈이 된다. 그래서 핵의 완전개발에 성공하게 허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북핵 관련 이해당사국들이 핵 제거 공격이나 체제전환의 용기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두 가지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다면 그 대안을 경청하고 싶다.

2. 한반도 분단문제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데 또 다른 하나의 문제 내지 걸림돌은 [한반도의 분단]이다. 내가 보기에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 내지 고착화되는 것은 남한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크게 불행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 그런가? 북한이 핵 포기과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현 체제를 지속시키려 한다면 결국 체제실패(regime failure)로 갈 수밖에 없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핵개발이라는 선 군사상과 체제유지를 위한 수령절대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상의 상보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두 정책이 지속되는 한-핵과 수령절대가 지속되는 한-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하고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한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도움을 주면 시간을 끌 수 있다. 북한의 체제 실패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의 대가는 너무 클 것이다.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며 특히 중국에게도 크게 해롭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도움은 결국 북한의 중국화 즉 중국의 변방속국화(tributary province)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의 변방속국이 된다면 우선 남한이 거국적인 대중항쟁을 시작할 것이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군국주의 노선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견제정책(re-balancing Asia)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중국을 중화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볼 것이고 그래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며 反중연대(counter-balancing coalition)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과 反중국’이라는 새로운 21세기형 신 냉전이 동아시아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은 중국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반도 분단의 지속, 즉 현재와 같은 비정상 상황의 지속은 중국에도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결국 통일-남한주도의 통일-이 되어야, 핵문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미래질서가 천하의 순리-개방과 상호존중과 평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미래가 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가, 미래의 평화와 번영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Ⅲ. 한반도 통일의 3가지 시나리오

한반도의 통일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3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합의 통일 (2) 군사적 흡수통일 그리고 (3) 합의형 흡수통일이다.

첫째의 ‘합의 통일’의 길은 현재의 북한권력이 혹은 현재의 북한권력을 대체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권력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결단하는 길이다. 그러면 1991년 11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지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통일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다. 합의 통일의 길이 우리 민족에도 이웃나라에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길이다.

둘째는 ‘군사적 흡수통일’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비의도적 사고에 의하여서든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고, 우리 군대의 대대적 반격을 받고 북한 깊숙이 진입한 우리 군대의 승리로,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경우이다. 즉 ‘군사적 흡수통일’의 경우이다.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합의형 흡수통일’의 길이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거부하다-현재의 비정상성이 지속되다가- 내부모순의 축적과 그 폭발로 인하여 스스로 체제실패(regime failure)로 가는 길이다. 이러한 경우 남한은 신속하게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안정화에 직접 앞장서야 한다. 그 안정화 과정을 보다 부드럽게(Smooth) 하려면, 가능한 북한주민과 군인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북한의 체제실패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공감을 미리 얻어 놓을수록 바람직하다. 이 길이 소위 ‘합의형 흡수통일’의 시나리오이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을 보면 불행하게도 북한의 자발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highly unlikely) 하다고 보고 있다. 군사적 흡수통일도 사실은 어렵다(unlikely)고 본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것(likely)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실패를 수반하는 ‘합의형 흡수통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북한의 체제실패는 언제쯤 올 것인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체제

실패는 반드시 오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체제 즉 수령절대주의와 핵개발을 수반하는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의 체제실패는 시간의 문제가 된다. 오늘날 세계화·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변화의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비정상 체제가 오래가기에 더욱 더 어려워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과정이 시작되면 적어도 5단계의 변화를 거쳐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정치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혼란을 안정화시키는 단계 (2) 북한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의 단계 (3) 북한경제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적 경제발전 전략(Export oriented labor intensive development strategy)을 추진하는 경제발전 단계 (4) 남북의 경제·사회 통합단계 (5) 남북의 정치적 통합단계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북한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여 남한과 북한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한동안 자본과 노동의 흐름을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한과의 경제적·정치적 통합을 ‘질서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IV. 통일과정의 두 가지 과제

남한주도의 통일의 경우 두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실패 이후 ‘북한의 안정화’를 얼마나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남한 주도로-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적 안정화와 경제·사회적 안정화를 빠르게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준비가 철저하고 충분해야 한다. 다만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에는 일정 부분 유엔군의 기여가 바람직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미군이 그 일을 맡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변화가 빠르고 시간이 촉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사전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중국의 군사적·비군사적 개입의 가능성 내지 필요성을 없애는 문제이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형태라도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반대한다. 중국의 개입은 남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충돌의 위

험을 크게 높인다. 설사 단기적으로 중국의 개입이 성공한다 하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오히려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모두를 위하여 중국의 군사적·비군사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개입의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건-중국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한국과 중국과 미국이 미리 함께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생각하는 데는 아마 3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통일 과정의 대량난민의 문제 (2)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의 문제 (3) 통일로 인한 변방 완충지대의 상실의 문제일 것이다.

대량난민의 문제는 남한이 주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실패 시 신속하게 북한전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 안정화 작업에 성공하면 사실 난민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황장엽 선생 이야기대로 북한의 체제실패 이후가 되면-그리고 남한이 식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면- 이제는 “자유와 식량”이 주어지는데 왜 구태여 고향을 떠나겠는가?” 하는 이야기기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화 작업만 성공하면 난민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 하나는 대량이든, 소량이든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체제붕괴 시 빠르게 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지대를 봉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아래에 난민캠프(refugee camp)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으로의 월경을 막기 위하여서이다. 그리고 모든 난민은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조치를 하면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대량난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한반도 개입의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통일 후 주한미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통일 후에도 미군은 3.8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을-현재의 위치를 지킬 것을- 중국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약속해야 한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 후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보균형자 역할을 하여왔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한 군사적 재무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도 안보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지금처럼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여야 하는가?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여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도-현재의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사실상 영(zero)이 되면, 그 때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중국이 군사적·비군사적 개입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완충지역의 상실이라는 생각,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라는 전통적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완충지대의 상실-자신들의 영향권의 상실-이라는 생각은 냉전시대의 낡은 생각이고 새로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과 북 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만남의 장(場)’이 될 것이다.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 한반도 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에게 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미(親美) 친중(親中)할 것이며, 당연히 친일(親日) 친러(親露)할 것이다. 자주독립과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기본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전통적 완충지대의 상실감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개입을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완충지대론은 지난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V. 미래를 향하여

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분단문제]의 해결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 한·중-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여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길-아마 유일한 길-은 북한의 체제 전환(regime change)을 수반하는 한반도 통일의 길이다. 이것이 아마 인민과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대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북한의 체제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체제전환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의 전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가능한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한·중간 지도자와 학자들 간의 모든 정책논의의 중심에 두어

야 한다. 나는 북한의 변화는 외부압박이나 외부유인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는 내부모순의 발전(모순의 축적과 폭발)에 의하여 올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외부환경과 조건을 내부모순의 발전에 유리하게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이 하여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한국이든 중국이든- 외부환경을 북한의 내부모순의 발전을 막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변화과정의 외부적 조건을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잘 협력하여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부모순의 발전에 유리한 외부조건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한중관계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진정한 동반자(partner/朋友)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통일의 전(前)과 후(後)에-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한반도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진정한 전략적 협력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 집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서로 지적으로 연대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지도자와 국민을 설득하면서- 올바른 국론(national judgement)과 공론(public judgement)을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패도(霸道)의 길이 아니라 왕도(王道)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맡은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고 확신한다.